

‘광주 女소방관 사망 의혹’ 진상규명 길 열리나

광주경찰청 내사 착수...국무조정실·소방청 검찰 진행 음주 강요·직장 내 괴롭힘·감찰 목살 의혹 규명 등 주목

지난해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의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내사에 착수하면서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6일 광산소방 소속 고 A소방교 사망 사건과 관

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전달 광산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관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고, 진정인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A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광산소방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7일 만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고인이 생전 상담한 내용이 면직 관련 행정문서에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고,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상급자의 잦은 술자리 참석 요구와 부당한 업무 지시, 조직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왔다.

또 광주소방본부가 사망 면직 처리 과정에서 사망 사유를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기재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하

고 있다.

광주소방본부는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도 수개월간 별다른 감찰에 나서지 않다가 유족이 소방청을 찾아 진상조사를 요청한 이후인 지난달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국무조정실도 직접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지난 12일부터 광산소방서를 방문해 음주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감찰 요구 목살 의혹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감찰 과정에서는 감찰 의혹이 제기된 간부급 소방공무원의 인사 과정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소방 소속 B소방경은 지난해 내부 익명 신고 제도인 ‘레드휠’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외근 부서인 현장대응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약 6개월 뒤인 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광주소방본부 내 계장급 내근 보직으로 다시 발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A소방교 유족이 광주소방본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던 시기와 맞물려 인사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사망에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강요 등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유족들의 감찰 요구가 조직 내부에서 묵살됐는지 여부다. 아울러 광주소방본부와 광산소방서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유족 측은 “국무조정실 감찰은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양산이 필요한 날씨 광주·전남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더위를 피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아동 성착취물 등 12만건 유포 범죄수익 10억 챙긴 일당 검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약 12만건을 유포하고 10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와 B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불법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약 12만건의 영상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임시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가 차단되면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서클’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용자 유입을 위해 주소 모음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이트 내에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배너 광고를 게시해 약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은 지난해에도 같은 유형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6명을 검거(구속 4명·불구속 2명)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화도 없이 공시송달”...대법, 원심 파기 경찰 소재 탐지 후 추가 확인 없이 재판 진행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게 가족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의 이숙연 대법관은 사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

기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 소재 탐지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주소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달했다.

A씨가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소금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A씨의 형제 연락처와 다른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라며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확인된다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장마철 광주·전남 빗길 교통사고 ‘비상’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 빗길 교통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로 59명이 숨지고 4500명이 다친 가운데, 올해를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8월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023년 422건(사망 12명·부상 632명), 2024년 241건(사망 4명·부상 372명), 2025년 310건(사망 5명·부상 478명)으로 집계됐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마다 수백 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마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수막현상을 꼽는다. 수막 현상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최근 3년간 2942건 발생...사망 59명·부상 4500명 강수량 증가 전망...“감속 운전·안전거리 확보해야”

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2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59명이 사망하고 45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090건(사망 26명·부상 1671명), 2024년 1048건(사망 22명·부상 1630명), 2025년 804건(사망 11명·부상 1199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평균 9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사고는 퇴근 시간대에 집중됐다. 최근 3년간 시간대별 사고 건수를 보면 오후 6~8시가 5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8~10시 366건, 오후 4~6시 3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사고 비중도 적지 않았다. 6

월형성돼 차량이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고속 주행 중 발생하면 차량 제어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빗물로 인해 차선과 도로 경계 식별이 어렵고 포드홀이나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광주경찰청은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이 높은 침수취약지역인 양동시장과 신안교 일대를 찾아 점검했다. 앞으로 취약지역 244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비가 내릴 때는 제한속도의 20% 이상 감속하고,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떨어질 경우 평소 속도의 절반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